

수거차량 초등생 참변... 사유지 내 인도 法 사각지대

폐기물 수거장 주차과정서 사고 아파트 단지 등 도로법 미적용 주민 커뮤니티 등지 불안감 확산 "자발적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을"

최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인도로 진입한 쓰레기 수거차량에 하교하던 초등생이 치여 숨지는 참변이 발생한 가운데, 아파트 단지 등 사유지 내 인도가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입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유지 내 교통 안전시설물 보강 등 보행자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49)씨가 몰던 5톤 폐기물 수거차량이 후진하던 중 하교하던 김모(7)양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김양은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위해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 인도에 후진으로 주차하던 과정에서 김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몰던 수거차량에는 후방 경고음과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지만,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이드미러를 보고 후진하다가 김양을 보지 못했다"고 자신의 부주의를 인정했다.



지난 4일 광주 서구 동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도 위로 주차선이 그려져 있고, 차량이 줄 지어 주차돼 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단지 인도 내 차량 진입과 주차 등을 막을 방법이 없어 안전대책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2·33조 등에서는 인도를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과 함께 6대 주차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부 인도 등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단속 및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마찬가지로 불법주차 방지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상 25cm 높이로 정해진 인도 설치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주차 면수보다 등록차량의 수가 많은 도심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인도 위 주차가 허용되거나 묵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일 찾은 광주 서구 동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도 위에도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운전자들의 차량이 뺑뺑이 들어서 있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아예 인도 위로 주차선을 그리거나 인도를 지나쳐 10여m를 주행해야 주차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야간 주차 허용구역으로 지정했다. 이곳 체육시설은 주민들의 보행로로도 기능해 주민과 학생들의

통행이 잦은 터라 주차를 위해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실제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차량이 학원 등에서 하원하는 학생 무리를 스쳐 지나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주 수거차량 참변 이후 광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의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에서는 단지 내 차량의 인도 진입과 주차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우리 아파트도 택배차량 등이 인도 위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된다', '차량의 인도 진입으로 인해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위험하다', '광주 참변 이후에도 인도 위 주차차가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등 사유지 관계자들이 보행자 안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도로시설물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파트 등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규정되지 않아 보행자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등 사유지 관계인들이 자발적으로 도로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형제복지원 피해자 정부 상대 소송 승소... "1억 배상"

1980년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부산 형제복지원에 3차례 끌려가 강제 수용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A씨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형제복지원은 지난 1975년 12월 박정희 정부가 부랑인 단속·수용을 위해 제정

한 내무부 훈령 410조에 따라 만든 전국 최대 규모 시설로 부랑자 선도를 명분으로 장애인, 고아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무고한 시민들을 납치·불법감금·강제노역·성폭행 등을 자행한 곳이다.

A씨는 1976년 부산진역 근처 파출소에서 단속돼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돼 4년이나 감금된 후에야 친형이 복지를 찾아오면서 퇴소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83년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에서 잡혀 재수용됐고 이듬해 탈출했지만,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다시 검거돼 또 다시 6개월간 수용됐다.

A씨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수용 시절 당시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돌가루 포대로 용변을 처리하고, 배가 고파 무덤가 주변의 흙덩어리를 먹고 토목 공사에 동원됐던 내용을 진술하기도 했으며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3차례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피해자로 인정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내무부 훈령은 위헌·위법해 무효임이 명백하고 원고는 임의로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 정부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진술의 구체성, 입·퇴소 시점을 정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A씨가 주장하는 수용 기간 전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차량 잠금 상태 꼭 확인하세요"... 주차 차량 절도범 구속

심야시간대 주택가 인근 문이 잠기지 않은 채로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광주 북부경찰은 상습절도 혐의로 20대 초반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께 북구 오치동·문흥동·각화동 일대 주택가를 돌며 주차된 차량에서 명품백을 훔치는 등 40여차례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군가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다발적으로 접수한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 인상

착의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A씨에 대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3시께 북구의 한 찜질방 앞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수차례의 동종전력이 있던 A씨는 생활고를 겪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후사경이 접하지 않아 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은 차량만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주거가 불안정한 점과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윤준명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